낙농육우협회 "백신접종시기 조정해야"

FMD백신접종시기가 혹서기인 8월로 예정됨에 따라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접종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최근 FMD백신접종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해 FMD발생으로 인한 백신접종 이후 유량감소, 유·사산과 같은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젖소의 경우 스트레스에 민감한 가축으로 백신에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FMD로 인해 살처분된 젖소가 3만6천두에 이르고 지난해 극심한 더위로 인해 원유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원유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며 "8월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이러한 부작용이 더욱 커질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협회는 "현행 6개월마다 백신 접종이 반복될 경우 매년 2월과 8월로 혹한기와 혹서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방침으로 백신접종이 이뤄질 경우 농가들의 피해는 물론 우유부족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현행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하도록 돼 있는 기준을 4~6개월로 조정해 줄 것과 비유초기나 임신말기 등의 개체를 고려해 백신접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다.

살처분 보상 농상 소득세 납부 주의 요망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해 보상금을 수령한 축산농가들은 소득세 납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업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어 자칫 살처분 보상금 수령으로 인해 축산사업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최고세율이 부과돼 비정상적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협 축산지원부가 최근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사업관련 수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과세대상이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당 축산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액에서 재산 상실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실제 돼지 3,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을 추정해 보면 정상사육시 319만6,000원에 불과하나 모두 살처분된 상황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2억1418만1,000원(살처분 보상가:마리당 33만원 기준)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재해손실세액공제(공제율 49%)를 받을 경우 1억923만2,000원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농가 사료구매 보조, 특단책 시급"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올해 축산농가 경영비가 지난해 보다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료구입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농협경제연구소(대표 이수화)는 최근 내놓은 '국제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박재홍 수석연구원)' 연구결과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의 두당 경영비가 전년 대비 비육우는 33만7천원(10.1%), 젖소 43만7천원(10%), 돼지 1만7천700원(7.2%)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육계의 경우는 10수당 1천600원 상승이 전망됐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20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국제곡물가격은 점차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0년 7월부터 다시 급상승을 시작해 2011년 2월 옥수수와 대두박, 소맥의 가격은 2010년 6월에 비해 99%, 31%, 96% 급등했으며, 2008년 애그플레이션 때보다도 각각 29%, 11%, 7%씩 올랐다고 분석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일정기간 시차를 두고 국내 배합사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옥수수의 경우 3~5개월 전에 평균가격이 10% 오르면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양계 1.5%, 양돈 1.5%, 낙농 2.3%, 비육우 2.7% 오른다는 분석이다. 대두박도 5~9개월 전 평균가격이 10% 높아지면 비육우 1.5%, 양돈 1.9%, 낙농 1.9%, 양계 2.3%의 배합사료가격 인상이 나

타난다고 분석했다.

악재 투성이었던 유업계… 1분기 실적은?

유업체들이 올 1분기 구제역 파동과 식중독균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체별로는 다소 엇갈린 성적을 보였다. 지난 5월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남양유업(003920)(718,000원 ▼ 9,000-1.24%) 매출은 두자릿수 신장세를 보였다. 매일유업(005990)(10,900원 ▲ 200 +1.87%)은 지난해 2분기 치즈업체 합병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해도 8% 가량 매출이 늘었다. 서울우유의 매출은 약 2.5%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남양유업이 전년동기 대비 32.7% 증가한 반면, 매일유업은 28.3% 줄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1분기 매출이 약 32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통상 1분기는 우유 판매 비수기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역 파동 때 공급량을 줄인 것은 성수기 때 물량 부족 현상을 대비해 실시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1분기 매출 2625억원을 기록해 17.6% 늘었고, 영업이익은 111억원으로 32.7% 증가했다. 남양유업 측은 "고마진 제품군인 분유 부문에서 고성장세를 이어갔고, 신규사업인 커피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쟁업체인 매일유업은 매출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다. 매일유업의 1분기 매출은 2379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에 비해 22.1% 늘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67억원을 기록하며 28% 이상 감소했다.

매일유업의 매출 신장은 지난해 4월 상하치즈를 합병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1분기에는 연간 1000억원 규모인 상하치즈의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1분기 매출 증가 폭이 컸다"며 "상하치즈 효과를 제외하면 약 8% 매출이 신장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 회사 측은 판관비와 인건비의 증가를 꼽았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외식 등 신규사업 확장 과정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광고비 등 판관비도 약 150억원 가량 늘렸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줄었다"고 전했다.

"축산업 허가제 유예기간 늘려야"

축산 농가 대표들이 정부가 마련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에 대해 개선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한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양록 · 양봉 7개 축종 생산자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5월 6일 발표한 축산업선진화 대책과 관련해 축산업허가제와 매몰보상금 감액 및 백신비용 분담 등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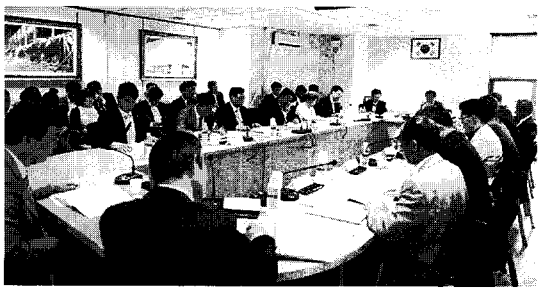
축산 생산자단체의 요구안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사육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축산업허가제의 경우 기존 농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농가 지원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농가에 대한 매몰보상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양성 농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20% 감액은 신고 기피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시가 100% 보상 원칙을 고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백신 비용을 접종 농가에 분담하도록 하는 문제도 정부의 방역책임 기피로 보일 수 있어 부과 대상을 전업농의 2배 규모(한우 · 젖소 100마리, 돼지 2,000마리)로 조정하고, 농가 부담 비율도 첫해인 2012년 20%, 2013년 30%, 2014년 50% 등으로 서서히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구제역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매몰 농가의 가축 재입식과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상금을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축산 생산자단체 대표들은 앞으로 축산업선진화 방안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 운영하고, 농식품부와 협의에 나서는 한편 토론회 · 간담회 · 궐기대회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농가들의 의견은 이해할 수 있다"며 "다만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 이를 고치거나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 현실화 논의 시작부터 대립각



낙농업계가 원유가 현실화를 놓고 시작부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의 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5월 18일 2011년도 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원유가 현실화 방안을 상정, 논의했다. 특히 원유가 현실화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실무작업반 구성을 놓고 2시간 이상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생산자측 이사들은 즉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유가현실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유업체와 소비자측은 우선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정확한 인상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맞섰다.

양측은 결국 2시간여의 논의 끝에 6월초 원유가 현실화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한다는 것을 전제로 5월 말까지 실무작업반을 운영키로 했다. 다만 실무작업반의 논의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1차례에 걸쳐 7일정도 연장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이날 생산자측 이사들은 "최근 사료값 인상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해 낙농가들의 소득이 2~3년 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운 지경이다"라며 "더욱이 최근 많은 농가들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원유가를 현실화시켜 낙농가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FMD나 FTA, 생산비 폭등 등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낙농산업의 기반은 급속히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질 경우 지금 당장은 수입해 먹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산기반은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업체나 소비자측 이사들은 낙농가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상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올려야겠지만 객관적이고 소비자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인상요인에 대한 분석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측 이사는 "원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가격도 오를 것"이라며 "당장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업체측에서는 "낙농진흥법상 원유가 인상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원유가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실무작업반에서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 이를 근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결과를 놓고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와 유가공협회에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원유가 현실화를 놓고 생산자와 유업체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2004년과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원유가 인상과정이 장기화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사료값 들썩 업계, 5~6%선 인상 계획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배합사료 업체들이 5월 들어 사료가격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료업계에 따르면 5월 중으로 kg당 30~48원, 인상율을 기준으로는 5~6% 내외의 사료가격 인상안을 일선 영업망에 통보했거나, 인상계획에 대해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폭은 업체별, 축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kg당 양계 40~48원, 양돈 40~45원, 낙농 35~40원, 비육은 30~4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옥수수 및 주요 곡물가격의 상승에 따른 원가압박, FMD(구제역)에 따른 시장축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1~6월) 기준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가격이 각각 톤당 286달러, 289달러, 517달러로 전년 하반기 대비 15%, 49%, 24%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